

환경청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 뒷말 무성

영산강유역청 '분지맥 흐른다' 황당 주장... 건립 위치 바뀌 광주시·도시계획위·환경단체 난색에 2곳 나눠 짓기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시 북구 중외공원 아파트(비공영시설) 입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주장으로 아파트 건립 위치가 바뀌면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부지 위치 변경의 명분으로 내건 '분지맥(分枝脈) 훼손'이 이례적인데다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중외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심의했다. 쟁점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내 아파트 입지와 규모였다. 위원들은 중외공원 내부 2곳에 아파트 2600가구를 나눠 짓고, 국립광주박물관 옆에 짓는 아파트 시설은 29층에서 3개층 줄인 26층으로 최고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안을 의결했다.

아파트 입지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가 설정했던 위치가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주장에 의해 뒤바뀐 것이다. 애초 민관 거버넌스는 국립광주박물관

서편 산비탈을 아파트 입지로 정했다. 국립광주박물관 주변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향후 시설 및 부지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남겨두는 것이 공공복리는 물론 상식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호남고속도로가 이미 관통한 탓에 산림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점도 감안됐다.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측도 민관거버넌스가 정한 입지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안을 짜다.

그러나 지난 6월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면서 계획안이 꼬이기 시작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계획한 아파트 입지 산비탈은 '(고속도로가 관통했으나) 분지맥이 흘러 보호가 필요하고, 산 뒤편에는 산단(본촌산단)이 위치해 아파트 입지로는 적절치 않다. 아파트 2600가구를 모두 박물관 옆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것이다.

'박물관 옆에 아파트 2600가구를 짓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에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박물관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

■ 중외공원 아파트 입지 변경



80m 높이의 고층 아파트 20여 동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애초 부지와 박물관 옆 부지에 아파트를 나눠 짓는다'는 대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간신히 마무리됐다. 애초 부지에 아파트 9개 동 1000가구(최고 27층), 박물관 옆에 16개 동 1400가구(최고 26층)를 짓기로 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아파트 입지 변경

관련 성명을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일관되거나 타당하지 않다. 아파트 시설 부지 입지와 규모가 타당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분지맥 보호는 백두대간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애초 아파트 부지로 제시된 공원 구역은 분지맥이 흐를 뿐 아니라 소음·악취 영향도 받게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년 7월 출범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직 윤곽

1본부·14산하시설·직원 287명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지원

내년 7월 개원 예정인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의 윤곽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연구 용역에서는 광주 사회서비스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인 재단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광주복지재단, 광주 빛고을건강타운,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공공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된다.

민간 사회복지 시설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기능도 하게 된다. 본부에 경영기획, 시설 운영, 커뮤니티 케어, 민간지원 등 4개 팀을 두고 종합재가센터,

어린이집, 요양 시설 등 14개 시설을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수탁시설 규모에 점차 확대된다. 2020년 15개 시설에서 종사자 285명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34개 시설에서 종사자 1341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예산으로는 22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출연금 7억원은 시비, 본부와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공간을 재단 사무실로 활용하고 재가센터는 자치구 공영주택 가운데 유휴공간에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복지재단과 기능 중복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광주시는 2개 노인타운 등 광주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온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조정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범 지역인 서울, 대구, 경남 등에서 문을 열었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광역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 어기고 예산증액' 도의원 징계

민중 전남도당

민주당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삼일위원회 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 의원들과 의원 간 폭력사태 등으로 지역민들을 실망시킨 자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 증액에 관련한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한근석(비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1개월 정지를, 오하근(순천4)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도의원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전 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예산 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했고, 오 의원은 부인이 배우자가 요양원을 운영하는데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또 민간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전년도보다 3배나 늘리는 내용의 증액 조서를 삼일위에 제출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소속 김을남 곡성군의회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동료 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기고 의정선거에 출마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김지우 기자 dok00@

전남도 규제개혁 성과 평가 영광군 '최우수'

전남도는 2019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기관으로 영광군 등 6개 시군을 선정, 19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한다.

영광군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력과 4륜형 전기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규제 완화 등 규제 건의 및 해소 실적에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 순천시,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11월 말 현재 신산업·지역 관광 활성화·영양차 의무·주민생활·토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402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이 가운데 39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목포시는 터널 내 사고 감지설비에 '레이더센서 기반 감지시스템(목포시)'을 포함시켰고, 보성군은 마을 어촌계 어업권 행사 조건이 해당 어촌계 단위로 한정됐던 것을 해당 지자체 규약으로 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겨울철) 어업 프로그램'의 육상작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해상작업까지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장오 전남도 세정과장(오른쪽부터),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장승규 전남도청노조위원장, 윤두환 공무원단체팀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 노사문화 전국 '최우수'

전남도가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1위)을 수상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상상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전국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발굴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3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뽑힌 것은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도는 공무원노조를 도정의 한 축으로서 도정 발전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도정 현안사업 성공 추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남형 노사문화를 정착,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 노사는 노사협의회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노사정립실천 협약을 맺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호·애·화 여행, 전직원 화합행사, 아듀! 당당콘서트, 공감톡톡 소통캠프, 자녀와 함께하는 명문대 탐방 등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블루 투어 관련 예산 1587억 확보

전남도는 16일 "2020년 국고예산에 '블루 투어'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관광문화 분야로 158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핵심 프로젝트로 남해안 인접 지역인 경남과 부산을 포함해 총 29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및 섬·해양자원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광역권 개발을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기본용역비 7억원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해남 아시아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

우 2009년 기반공사 완료 이후 장기간 미자유치 등 투자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20실 규모의 국민휴양마을조성비 총 384억원 중 84억원이 확보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관리를 위한 나무목 객사 금성관 보수 2억원, 두륜산 대흥사 경관정비 3억원,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수 등 506억원이 확보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